기존 정책 재탕·보완 … 수도권 완화 반발 잠재우기

■ 지방발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 R&D특구 지정 등 지역 요구사항 빠져

광주~완도 고속도 등 장기과제로 밀리기도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2단계 지역발전 정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 데다 구체적인 추진시기 등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정부가 이미 단계적으로 발표키로 했던 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등 국토 개발정책을 더 구체화해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지역 발전에 5년 동안 총 100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에 포함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목포~광주~익산~오송) 완공시기 조정, 남서권 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 등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대표적인 사례다.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수년 동안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본격 추진을 정부에 촉구해온 사업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인 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이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업들의 구체적인 완료시기 등을 명시한 게 아니라, 초광역 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오히려 장기 과제로 미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이 오히려 퇴보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주 R&D특구 조성의 경우 광주시가 그동안 특구 지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더구나 대전, 광주, 대구를 아우르는 내륙 첨단과학벨트 구상을 발표했지만,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정부는 이날 대구와 광주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R&D특구를 내년 상반기 중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검토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이전 기업 지원방안도 단지 기존 정책의 수혜폭을 확대한 정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비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위해서는 지방산단 진입도로 개설,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이 절실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누락돼 있다.

이건철 기획경영실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속빈강정'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동·서·남해안 특성화+남북접경 벨트 조성

■ 초광역개발권 구상 어떻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가 15일 5+2광역경제권 보완책의 일환으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구상을 제시했지만, 지역민의 반발을 잠재울 만한 내용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광역개발권 계획은 5+2광역경제권 발표 당시 함께 제시됐던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물론 사업시행 시기도 나오지 않은 알맹이 없는 계획이며, 기초생활권 구상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얘기다.

균형발전위는 초광역개발권에 대해 새 정부들어 제시한 5+2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이 규모의 경제 및 대권역 개발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의 허브 경쟁에 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바꿔 국가경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권은 대도시권 중심 개발의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공간을 재창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상 및 육성과제를 보면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 거점 구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전진기지 구축,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 및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환황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도시 육성,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해안 선벨트'는 항만·물류산업과 국제무역·금융거점 구축, 남서권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 조성, 물류·산업·휴양 복합거점 개발,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문화관광권 개발 ▲'남북교류접경벨트'는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존 및 녹색관광 육성,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은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고,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통합개발이 골자며, 농산어촌형은 인접 군 단위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효과 알 수 없는 미봉책" 지방 살리기 반신반의

■ 광주시·전남도 반응

정부가 1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지역발전종합대책'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효과를 알 수 없는 미봉책이라며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에 나왔던 대책의 수치 조정에 불과한 재탕이거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에 요구했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5+2 광역경제권'의 전면 재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필적할 획기적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도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에 J프로젝트,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광양항 자유구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이 다수 포함돼 있긴 하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없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정부가 밝힌 지역발전종합대책의 하나인 초광역권개발계획에 대해 "'5+2광역경제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권역 재설정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특히 정부의 이날 발표가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자칫 정부의 기존 안이 확정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에 전남지역의 현안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데 대해 일단 환영했으나 구체성이 전혀 없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2010년 개최 예정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중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키로 했다.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대상 주요과제 중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는 '광양경제자유구역 확대'의 경우 광양항 활성화 사업과 연결돼 있고, '남서권 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영암-해남)는 J프로젝트를 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 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서남권),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남북 2축(서해, 전라축) 철도망 구축, 호남고속철 완공시기 조정 등이 포함돼 도내 SOC건설 사업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안 염전 등 문화공간 조성 3조 투입

■ 지역문화발전 얼마 쓰이나

신안, 장흥, 담양, 완도 등에 조성되는 '슬로시티'가 저탄소 녹색 관광상품으로 활용되며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는 2009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문화발전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2012년까지 시·군 등 기초생활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총 3조3천여억원이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에 3천640억원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1조4천658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에 1조267억원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에 4천505억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 251개관, 박물관·미술관 180개관, 문예회관 25개관을 추가 건립하고,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해 문화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지역의 폐교와 간이역 등 유휴시설 45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어촌 작은 도서관을 매년 50개관씩 확충해 2012년까지 412개관을 마련한다.

그밖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스포츠바우처, 복지관광 등 '나눔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100여개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파견, 전국 4천700여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 전국 600여개 초등학교에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